공동대표 김균 · 이석태 · 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행정-2014-1003

수 신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원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제 목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날 짜 2014. 10. 30. (총 3 쪽)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9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이하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가 주관하여 개최한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7가지 개혁방향 및 주요 공기업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가 위 공청회에서 발표한 방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을 귀 의원에게 아래와 같이 전달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참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9월 19일 "국민의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공청회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 주요내용을 보면,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개선, 임원보수 조정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미흡하고, △ 공공기관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인사제도 혁신,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등 7가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방향이어야 하며, △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LH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를 개편하겠다는 것임.

2) 우선 참여연대는 방만경영 개선이나 임원보수 조정 등이 공공기관 개혁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하지만 공공기관이 수행해왔거나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공적기능과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무분별한 자산매각과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함.
   나아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동안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던만

공동대표 김균 · 이석태 · 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큼,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봄.

3) 2004년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기본틀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을 제정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소유권'은 기획재정부로, 사업의 전반적인 감독은 각 주무부처로 이원화시키고, 예산편성지침 등 경영지침, 경영공시,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려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및 이사 임명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적격자에 대한 '보은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쟈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 사태에서 보듯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역할이 맡겨져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음.

4)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독립성이 취약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 302개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30개 공기업 또는 14개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을 선임하는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여,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견제기능을 확보해야 함.

* 시장형 공기업(14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준시장형 공기업(16개)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주무부처의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토록 하여 비공식적인 정부간섭을 투명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고, 노동계 역시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차관 또는 차장급 공무원들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전문가와 시민사회 및 노동계 대표자들을 공공기관운영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운영위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5) 한편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가 제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

공동대표 김균 · 이석태 · 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실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임.
단순하게 소속만 이관하는 것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회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책 및 집행기능을 모두 가진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되도록 해야 함.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 발표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더라도 분과위원회를 두어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준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하도록 이원화하는데, 이 경우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 인만큼, 국무총리실로 소속을 바꾸는 것의 의미가 반감될 것임.

<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 비교

	현행 공운법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 발표안	참여연대 의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속	기획재정부 소속 (공운법 제8조)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모델)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위원 : 관계 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기재부장관 추천 외부인사 (공운법 제9조)	위원장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위원 :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포함토록 함 (전문가,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 추천)
공기업 기관장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과 대통령 임명 (공운법 25조 1항)	주무부처 장관 또는 임원추천위 추천, 공운위 검증과 대통령 임명	대통령 임명 전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공기업 비상임 이사 선임	임추위에서 경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운위 심의의결 후 기재부장관 임명(공운법 제25조 3항)	정부 인사의 당연직 이사제 부활	주무부처 실국장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참여 및 노동계 추천 인사의 비상임 인사 참여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